

<토론문>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문은 민주당의 경제·민생분야 대선공약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노선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선공약평가에서는 진보정치는 패배했지만 진보적 정책노선은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제점으로 진보정치의 위기로 인한 공약의 신뢰성 약화, 쟁점화되지 못한 ‘실질적 경제민주화’, 경제양극화를 극복할 새 경제질서 비전 제시 미흡등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의 정책노선으로는 민생진보라는 큰 타이틀하에 대선슬로건이었던 기회평등의 보장,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생과 협동의 공동체적 가치와 함께 누리는 혁신적 성장을 추가하여 3대 정책비전으로 ①기회평등의 실질적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 신장(보편 복지의 심화), ②공정·상생·협동의 시장경제질서 확립(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③함께 누리는 혁신적 성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보완 혹은 토론이 필요한 몇가지 사항만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부족 혹은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비전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기존에 이미 언급된 대책들을 모아놓은 것이어서 새누리당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불명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실업자는 74만명 수준이지만 실질실업자는 300만명, 여기에 600만명의 자영업자 속에 숨어 있는 위장실업자까지 합치면 400만명이 훨씬 넘는 실업자가 존재한다. 이들 실업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200~400만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규채용 증대와 임금인하를 수용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노사 모두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전략을 추진하되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창출전략을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이야기하면 이미 있는 자영업자도 과잉이고 대부분의 창업이 실패로 끝나 양극화만 더 심화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평자가 말하는 창업은 준비안된 영세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한 경력형 창업, 기술창업, 협업창업을 말한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경력형 창업, 대학이나 출연연이 보유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업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규모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경력형 창업은 또한 창업을 목표로 한 기업 경력 선택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mismatch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기술창업은 대학기업,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의 효과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협업 창업은 과잉자영업의 구조 조정의 수단이자 청년들의 사회혁신의지를 구체화하고 실패기업인들의 패자부활을 돕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어떠한 창업이든 창업은 취업보다 어려운 것만큼 취업준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창업준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창업훈련을 의무화하고 학력이나 영어보다 창업훈련이 최고의 스펙으로 인정받는 수준이 된다면 한국인에 내재된 강력한 기업가DNA가 만개하여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한국형 '창업국가'가 탄생될 수 있다. 아울러 준비안된 창업으로 실패자만 양산하는 현재의 창업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구쪽에서 패자부활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입구쪽에서 체계적인 창업훈련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비용효율적이다.

둘째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인데, 대학이나 출연연에는 기술창업이나 벤처창업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집중되어 있어 고성장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잠재력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고급인력들은 고용안정성과 온실속의 연구에만 관심있을 뿐 창업의 모험은 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의 고급인력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보다 벤처창업을 선호하고 독일의 정부연구소의 고급인력들이 고용보장이 안돼 스피노프 창업의 모험을 선택하는 것과 대비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대학이나 출연연에 대한 지원에서도 창업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창업지향적으로 바뀐 대학이나 출연연이 제대로 된 창업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제대로 선별하여 제대로 된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책에 관한 정보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는 이러한 정보축적이 없어 정보비대칭상태에서 ‘묻지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 못지 않은 ‘정책의 실패’가 있었고 정책지원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책에서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업과 정책에 관한 정보축적과 활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